

“대학 문닫기 직전, 한결같이 ‘임금체불’ 있었다”

교비횡령 등 운영자 부정비리에
12개 대학 폐교, 총 800억 체불

‘혁신 지원방안’ 사후대책 그쳐
“심각한 체불뎀 감사 실시해야”

현재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전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직원 임금체불은 기존 폐교대학이 문을 닫기 전 공통적으로 보였던 특징이기 때문. 폐교 후에는 교직원 등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큰 만큼 교육부가 폐교 위기에 직면한 대학을 사전조사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교대학 징조는 ‘임금체불’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운영자의 부정·비리와 교직원 임금체불로 문제가 불거졌던 동부산대학교가 최근 자진 폐교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부터 폐교한 사립대는 12곳으로, 지난해에만 4개 대(대구미래



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가 문을 닫았다.

고등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폐교직전 교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

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대 체불임금이 약 430억원, 서남대 체불임금은 330억원에 달한다. 한중대와 서남대의 폐교 당시 교직원 수는 한중대 166명(교원 124명·직원 42명), 서남대 404명(교원 346명·직원 58명)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들 대학들은 예외

없이 교비횡령 등 대학운영자의 부정·비리를 겪었다”면서 “이들의 부정·비리는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의 손실을 초래했다. 결국 그에 따른 고통은 대학구성원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동부산대학교의 횡령액을 변제하면서까지 대학을 인수할 주체를 찾기는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이미 ‘사양산업’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학 사업에 손을 내밀 구원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대학…교육부, 사전조사 나서야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밝힌 해당방안이 ‘사후대책’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후속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직원 임금체불 내용을 정리해 기록물을 보존하겠다는게 골자

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처분가능하도록 별도기준 마련해 ‘국고로 귀속되는 폐교대학 잔여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책은 폐교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교연은 “대학구성원의 고통과 부실운영의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영근 복잡한 과제인만큼 잔여재산 처리 등의 ‘사후대책’을 세우기 전에 ‘사전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면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임금체불 상태가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대학운영자가 교비회계에 손실을 미친 정황이 확인되면 손실보전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외국인직접투자 4.8% ↑… 5분기 만에 반등

3분기, 36.1억불… 누적 135억불
올 외국인투자 200억불 달성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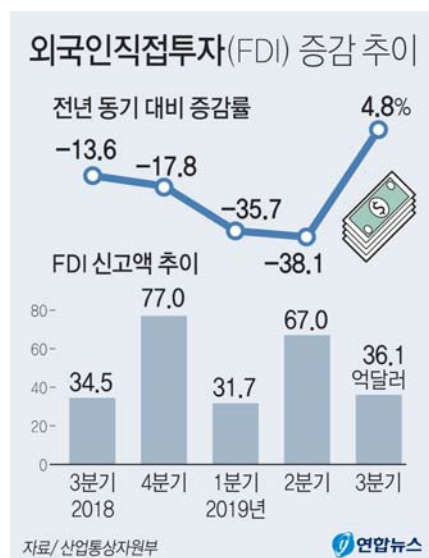
지난3분기(7~9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하면서 5분기 만에 반등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하락 전망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비교적 선방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5년 연속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36억1000만달러(약 4조 3000억원)를 기록해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FDI 신고액 누적실적은 134억9000만달러(약 16조 1000억원)를 기록해 연말로 갈수록 투자가 늘어가는 통상적인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0억달러 목표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글로벌 FDI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



은 수준이었던 2018년에 비해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신산업 분야 FDI는 15억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계속 다변화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 업종은 첨단소재·부품,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을 말한다.

일본 수출규제 속에 소재·부품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한민국 투자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작기계 업계 올 수주 1603억… 41% ↓

수출수주 953억… 47% 급감

세계 경제 성장 둔화 흐름 속으로 대내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작기계업계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 수주 모두 감소한 가운데 특히 공작기계 업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동차 업계에서의 수주도 크게 줄어 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10일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 7월 공작기계 시장동향’에

따르면 7월 공작기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160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수주는 953억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47.4% 줄었다. 공작기계 수출수주는 올해 들어 처음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내수 수주도 65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4% 줄었다.

공작기계협회는 공작기계 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내수 시장에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배한진 기자 ericabae1683@

5G 자율주행차 마곡 일반도로 달렸다

LG유플러스, 기술공개 시연
원격호출·차량 영상전송 등 중심

LG유플러스의 5G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렸다.

LG유플러스는 1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V2X(차량·사물간 통신) 기반의 일반도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공개 시연했다.

5G-V2X를 탑재한 상용차가 자율주행으로 통제되지 않은 일반도로를 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연은 출시를 앞둔 LG전자의 5G-V2X 통신단말과 마곡 일대에 구축된 LG유플러스의 5G 통신망 및 자율협력주행 플랫폼(관제센터, 다이나믹 맵, 정밀측위 등)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5G-V2X 자율주행 시연은 현대 자동차의 상용 모델 ‘제네시스 G80’을 기반으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 일반도로 2.5km 구간을 15분간 주행하며 6가지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실제로 시연은 ▲자율주행차 원격 호출 ▲선행차량 영상 전송 ▲무단횡단 보행자 감지 ▲긴급차량 접근 알림 ▲비가시영역 ‘지오펀싱(지리적 울타리)’ 대응 ▲다이나믹 맵 기반 사고현장

전력수송 중 손실액 5년간 8조 넘어

손실금 매년 늘어 작년 1.8조 달해

전력 수송 중 발생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어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배전 전력 손



LG유플러스 및 LG전자 관계자들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5G-V2X 자율협력주행 시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회피 등 교통 체계 전체의 진화를 나타내는 기술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시연의 시작인 ‘원격 호출’이었다. 이날 시연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탑승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자율주행이 일상화되면 고객들은 이처럼 앱을 통해 자동차를 호출할 수 있게 된다.

본격스마트 교통 시대에는 탑승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자율주행 센서가 인지 불가한 순간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변 지능형CCTV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다이나믹 맵을 통해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시 스스로 주행 속도를 낮춘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와 상관 없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사전에 감지, 즉시 정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센서는 통행신호인 녹색불을 확인했지만, 주변 지능형CCTV로부터 받은 무단횡단 보행자 정보로 사고를 선제 대응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 4459건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연을 기반으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일대를 5G-V2X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손실금이 발생했다. 전년 1879만97MWh보다 56만258MWh 더 손실한 수치다. 손실액도 2114억원 증가했다. 송·배전 손실량은 2015년 1797만9210MWh에서 3년째 증가세다. 손실액은 2016년 1조5336억원에서 2년 연속 늘었다.

어 의원은 “송전탑 등 송전설비 증가로 전력 손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